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전남서남	061-462-7177
남동공단	070-4756-0119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경기	031-251-7095	포항	064-278-1339
안산/시흥	031-491-7097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02-2636-2148	창원공단	0899-2090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부산/양산	051-637-7433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장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광주	062-453-4012	대전충북	043-236-5077

바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7년 1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2-3면 전국은 지금 / 경기, 충북, 서울

7면 노동안전보건칼럼

4-5면 카드뉴스 / 박근혜 퇴진, 다른 세상 만들기

8면 투고 / 택배노동자 권리 찾기

6면 이주노동자 칼럼

2017년 최저임금, 달라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공단 중 중소기업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디지털, 의정부 용현,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 등 일곱 개 단지에서 무작위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공단노동자 1,291명이 응답한 결과, 24.5%가 법정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공단노동자 중 24.5%가 법정최저임금 못 받아

설문에 응답한 공단노동자들은 평균 주 48.9시간 일하고, 임금 평균은 한 달 206만9천원이었다. 이 임금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감안해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면 8천152원50전이다. 이 조사에서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4.5%였다. 응답 노동자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각각 여성노동자 30.7%, 이주노동자 38.8%, 단순직 노동자 35.7%, 비정규직노동자 29.9% 이다. 공단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4.5%로 높은 원인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시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다.

OECD 국가 저출산율 1위 산재사망률 1위 장시간노동 1위 이대로는 안됩니다.

여야 정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기엔 턱없이 낮은 나쁜임금 😞
청년들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하는 절망임금 😞
알바·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도둑임금 😞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늦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월209만원
민주노총은 지금 당장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국민 가계부채 1200조, 재벌 곳간에는 1,200조! 그런데도 경제위기가 노동자들 탓이라고요?

서민경제가 걱정된다면 바로 지금,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재벌곳간이 쌓일수록 서민들의 빚잔치가 늘어났다
주휴수당 1200도 못받아서 함께 삼자-
가계부채 1천2백조
가계소득 1천2백조

민주노총

최저임금, 올해는 달라야 한다

노동자대표조직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바꿔야 하므로 시급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2~3인 구성 가구의 주 소득원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에 따르면 중간소득계층의 2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이 220만원이고, 3인가구가 33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 시간외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란 ①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휴일근로를 말한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한다. 연장, 야간, 휴일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지역	빈도	노동시간	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1290	48.9	206.9	24.5
성별	여성	619	46.1	170.7	30.7
	남성	660	51.7	239.7	18.8
이주	정주	1012	48.0	211.3	21.1
	이주	165	56.5	184.7	38.8
직업	숙련직	137	50.7	251.8	13.1
	기계조작	253	54.5	203.4	32.0
	단순직	457	49.1	173.8	35.7
규모	5-9인	150	46.3	209.7	16.7
	10-29인	325	48.6	203.8	24.6
	30-99인	399	48.2	197.9	26.3
	100-299인	177	51.0	203.9	32.2
	300인 이상	106	53.1	268.1	10.4
고용	정규직	740	49.1	218.0	20.7
	비정규직	546	48.6	190.6	29.9

공단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비율

❖ 주휴수당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즉,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상반기 결정한다. 매월 지역과 공단노동자들에게 배포하는 <바지樂>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내용을 지속해서 다룰 예정이다.

100% 사내하청 공장도 ‘불법파견’ 인정

현대위아 평택공장 불법파견 판결...“정규직 혼재 없어도 원청 지휘하면 불법파견”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2016년 3월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지회 무력화 시도하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계열 부품사에 대해 최초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현대위아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이

2014년 12월 “현대위아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년만인 2016년 1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위아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위아 평택 2공장은 정규직이 없는 100% 사내하청 공장이다. 현대위아 평택 1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담당하는 엔진가공업무와 연동되지 않는 엔진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법원은 100% 사내하청 공장인 현대위아 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대한 실질 작업 배치권은 현대위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는 형식적인 작업배치권만 가지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수행 형태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제공한 공정표에 기반한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과 조립방법을 정하고 조립업무를 수행했다”며 “현대위아가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이 원청 정규직과 같이 일하거나 정규직 공정과 연동된 경우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과 무관하게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해고 없는 연말 만들기’

“2016년 광장의 촛불을 2017년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촛불로”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료들과 어울리며 지나가던 한 해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 온 사실에 대한 감사와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다짐을 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시기다. 그러나 연말연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기는 아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시기다.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이 좌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4년부터 매년 해고 없는 연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4년 경비노동자의 분신을 계기로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경비노동자에게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4년부터 매년 해고 없는 연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5년 교육청에 계약직으로 고용한 스포츠 전문강사의 해고문제를 지역의제화 했고 교육감으로부터 고용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노동자들의 해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014년 경비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리는 선전전을 시작했다. 2015년 교육청에 계약직으로 고용한 스포츠 전문강사의 해고문제를 지역의제화 했고 교육감으로부터 고용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2016년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연초부터 조선업과 철강산업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여파로 대부분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청주공단의 SK하이닉스와 LS전선이 이미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강행했다. 운동본부는 2016년 청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정년문제, BTL학교(교육청 위탁)의 시설노동자들의 계약해지를 비롯해 공단의 미조직노동자들에게 해고 없는 연말 만들기 캠페인 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촛불집회로 광장의 민주주의가 발현되었다면 2017년은 우리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합쳐보자. 올해 해고 없는 연말을 기대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촛불이 오르다

박근혜 퇴진 1천만 촛불집회에 나선 노동자가 드리는 글

광화문광장에서 주말마다 거대한 촛불이 박근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구로-금천지역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꿈수담화와 제도권 야당의 헛발질 등 권력집단의 본질을 알아 버린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촛불함성으로 전국을 뒤덮어 버렸고 '박근혜 퇴진'은 이제 기정사실이 돼 가고 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우리 노동자를 위한 근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경험했다. 2016년 시민혁명이 2000만 노동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벌여야 한다. 지난해 11월26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의 열기를 통해 촛불의 위대함을 느꼈다. 이 느낌은 일종의 즐거움이었다. 너 무 거대해서 도저히 어찌해 보지 못할 것 같은 박근혜 권력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든 100만, 200만, 1,000만 촛불의 힘으로 나와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

다는 환희를 맛봤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에서 부른 노래처럼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재벌에게 뇌물 받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나라에서 일하

는 사람, 노동자 서민이 잘 사는 나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서야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27년 군사독재를 19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뜨리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우리 시민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

았다.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87년 7월, 8월,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으로 우리 노동자도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노태우 군부독재가 다시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을 켜자 퇴근 길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주뻗 주뻗 다가와 나와 같은 노동자가 건네는 촛불을 함께 들었다.

하나 둘 촛불 든 사람들이 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세우고, 한 발 더 나아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세우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억압받는 이들의 든든한 지킴이, 노동조합

[책소개]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글: 김유미, 만화: 반지수, <사회운동> 출판,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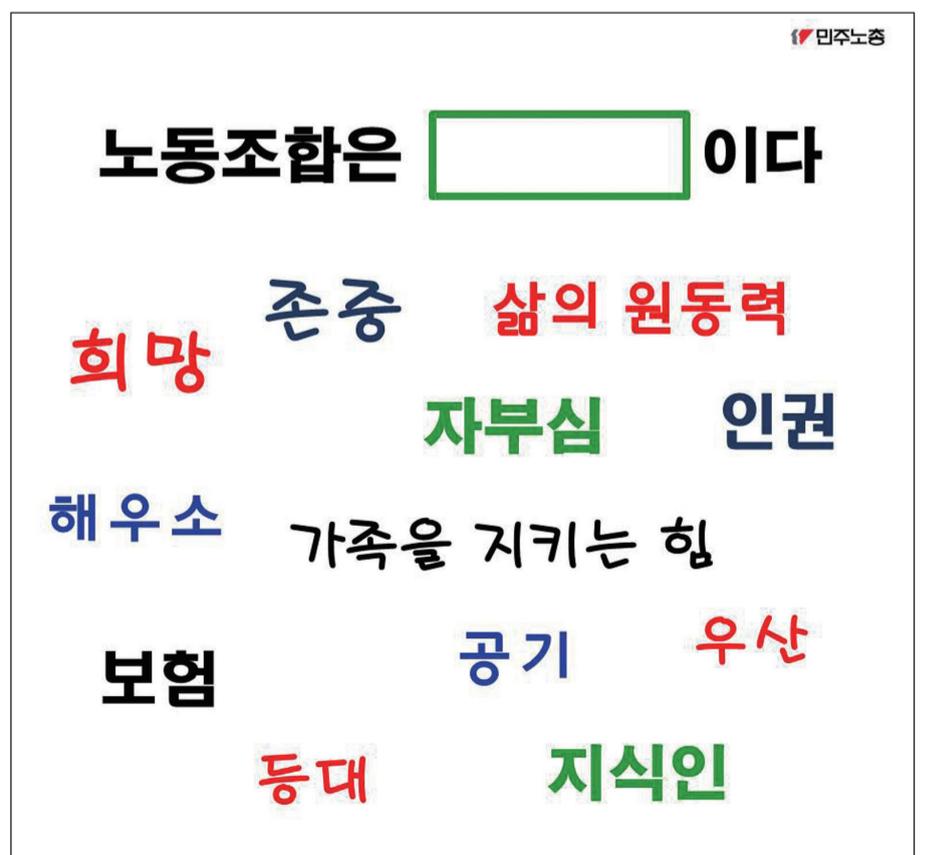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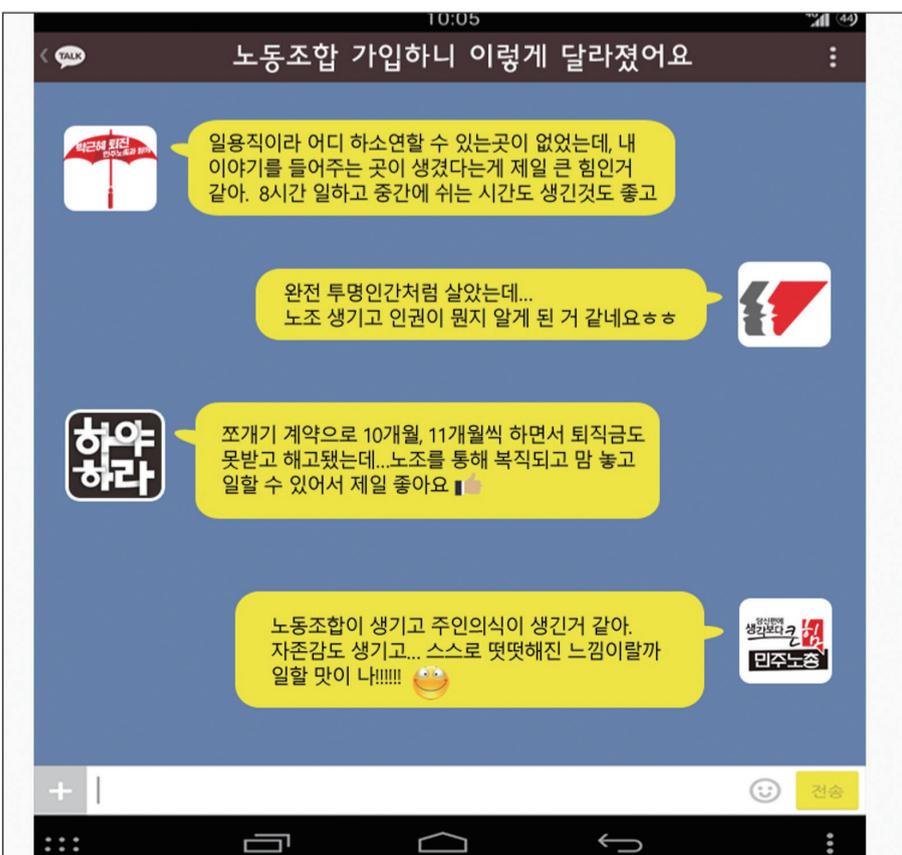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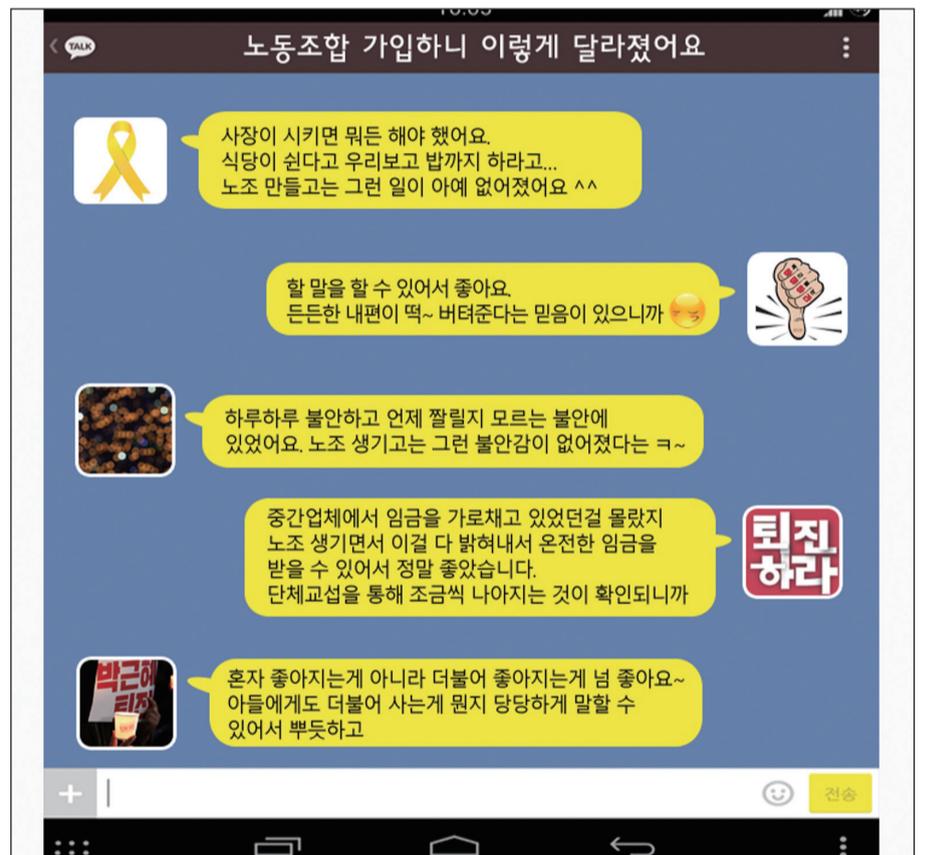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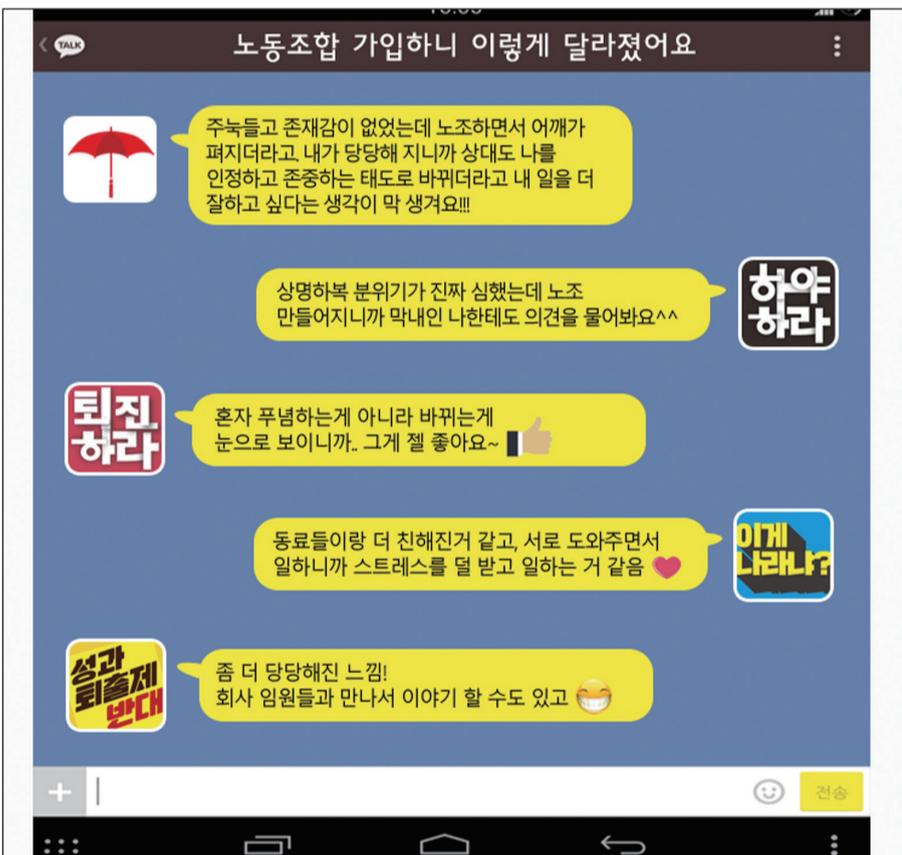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마음으로 적고 그려낸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두에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노조 할 권리'가 상식이 되는 사회, 그 꿈을 실현해온 소중한 경험담이 구석구석 전달되길 바랍니다.

- 서울구치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송곳', '카트', '어셈블리'..... 이제 노동조합은 우리에게 멀고 낯선 존재가 아니다. 공중파와 종편 드라마, 상업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는' 긍정 이미지로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파업에 대해 좋지 않던 여론은 이제 달라졌다. 최근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시민 반응만 보더라도 비난보다 지지와 응원 의 물결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열두 개의 일터, 스물네 가지 이야기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는 정형화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 스물네 가지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일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 저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해고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대처법을 '나의 이야기'처럼 대화하듯 말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귀화해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여성노동자보다 못한 처지에 빠진 귀화 여성노동자

2016년 10월20일 발표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42만 여명 가운데 68%인 96만 여명이 취업 중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국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동포, 영주권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이 포함된다. 이 조사에서 제외된 이주민들이 있다.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주민들이다. 이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통계 자료는 없다. 2015년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혼인을 통한 귀화자는 12만 5천여 명이고 이들 중 64%인 8만 여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고 한국 사회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뿐이며 한국에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정당화돼 왔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귀화 노동자들은 당연히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귀화한 이주민들, 특히 여성 귀화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국 사회가 결혼이민자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역할만 기대하고 있는 사이 귀화 여성노동자들은 어느새 노동자가 되었고 가족 부양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료사진>

있다.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는 물론 외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올 여름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여성 제조업 이주노

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귀화한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등록 이주노동자들보다도 좋지 않은 노동조건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태조사 결과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월 1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귀화 여성노동자 70%는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여성 이주노동자 9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귀화 여성노동자 6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다.

미등록, 고용허가제 여성 이주노동자 90% 이상이 받고 있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귀화 여성 노동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본인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 가산임금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임금체불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국 사회가 결혼이민자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역할만 기대하고 있는 사이 귀화 여성노동자들은 어느새 노동자가 되었고 가족 부양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17년부터 바뀌는 법 **생활정보**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시행한 60세 정년이 2017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2013년 4월 국회가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60세 정년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 입사이력서 개인정보 기입 제한

2010년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입사지원서와 이력서에 구체적인 가족사항과 부모의 직업, 신체사항 등 채용에 불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된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 학교를

직무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의무



직무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노동자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외부 정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하더라도 부정확하게 감지해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 (자료사진)

직무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육체 긴장 상태를 말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주로 소음과 진동, 조명 등 부적절한 작업환경, 과도한 업무요구와 업무강도, 직장상사와 갈등과 고용불안, 불합리한 승진체계 등에 의해 발생한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수록, 일의 양과 작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직장동료와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 수밖에 없다.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노동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체는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맥박, 혈압, 혈류, 혈당, 호흡 등이 증가한다. 몸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항한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지나치게 강하면 우리 신체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육체와 정신은 질병 상태로 떨어진다. 직무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노동자

들은 음주량과 흡연량이 늘어나 경우에 따라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생긴다. 불안과 불면, 두통이 잦아지고 과로와 겹쳐 뇌심혈관계 위험과 정신과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집중력이 떨어져 외부 정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하더라도 부정확하게 감지해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주

가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노력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시간 근로, 교대작업(야간작업포함), 차량 운전, 정밀 기계조작 작업 등 신체 피로와 정신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작업환경 근로시간 개선과 작업 계획 수립 시 작업자의견 반영, 작업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의 조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업무와 관련 스트레스를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해 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자들이 모여 우리 사업장의 작업환경, 업무강도, 작업속도, 휴식시간, 승진체계, 상사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감소할 대책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방문해 신청할 수 있던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150만원으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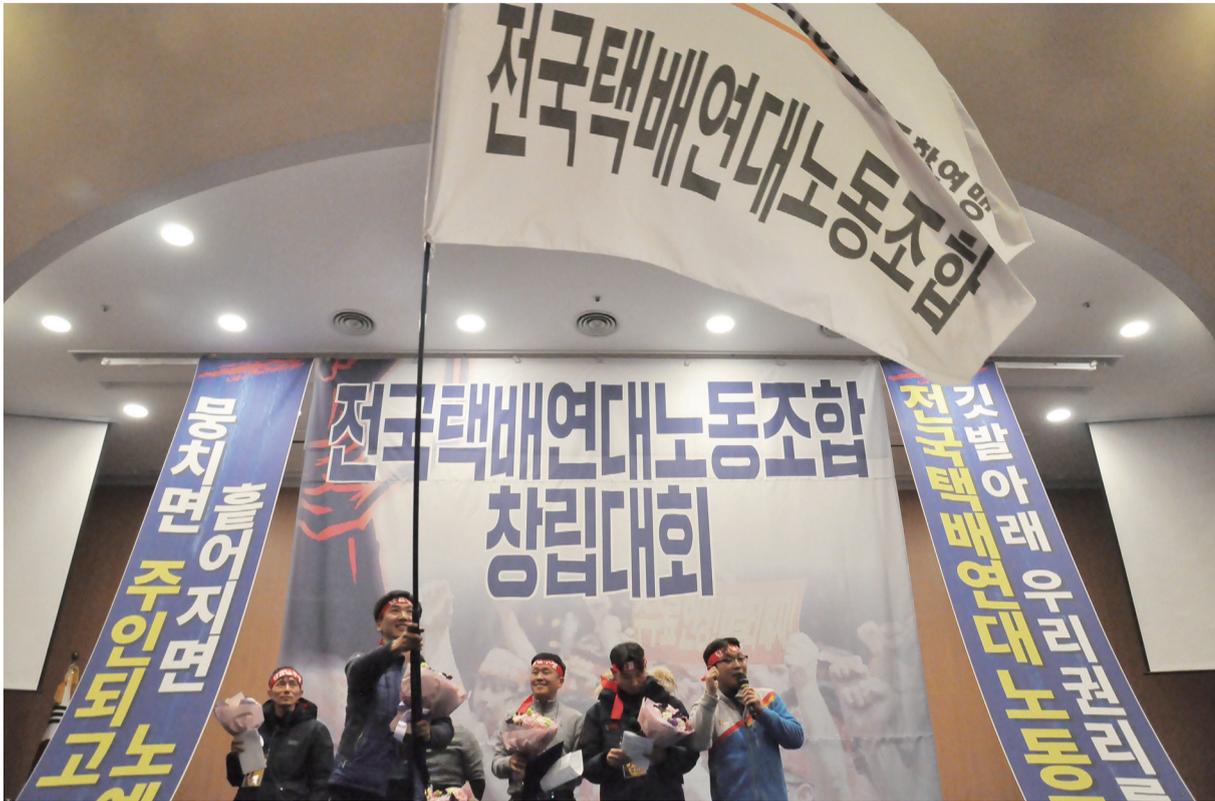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한다. 단, 급여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택배노동자 권리 찾기, 전국 단위 노동조합 만들다

[투고] 하루 평균 14시간, 좀비처럼 일하는 택배노동자



1월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아침 7시 출근해 오전 택배 하차분류, 오후 배송-집화-상차, 야간 배송,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퇴근합니다. 이렇게 주 6일 일합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입니다. 게다가 오전 하차분류는 무임금입니다.

절반에 달하는 기사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휴게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계속 낮아지는 수수료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될 수 있는 고용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현실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기사 권리 찾기 전국모임'을 개설했고 기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1,500여명이 가입했고 현재 2,750여명이 회원입니다. 온라인 소통의 장이 열리면서 현장의 소식들을 공유하고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모든 택배기사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고충은 노조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5월과 8월 광주와 서울에서 오프라인 전국기 사모임을 열어 현장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12월4일 국회토론회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는 12월18일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올해 1월8일 창립대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전국의 택배노동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CJ대한통운, 롯데(옛 현대), 한진, KG 등의 택배노동자(기사)들과,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택배 관련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많은 기사들의 격려와 응원의 문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업체들의 '노조 가입하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십여 명의 기사들이 노조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창립발기인 100여명으로 시작해 창립대회 후 매일 수십여 명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는 많지만 택배

노조는 우선 네 가지 요구를 걸고 CJ대한통운 등 거대 택배자본과 싸우려 합니다. ▲갑질 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무임금 하차분류 노동 정당한 대가 지급 ▲간선하차차량 지연과 터미널 잔류문제 해결 ▲최저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설립 과정에서 서울 용산터미널의 동부이촌대리점 기사 네 명이 '갑질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로 인해 얼마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내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대 업체들은 자본으로 회사조직을 구성하고 이 힘으로 우리 택배노동자들을 관리합니다. 개인이 싸우면 결코 이기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을 만들면 조직 대 조직의 대결로 만들어 해 볼만 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승리해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월8일 창립대회에서 손을 잡고 단결을 결의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제 막 출발했지만 조합원 확대 사업에 주력해 택배기사 권리를 하나씩 찾고자 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고 승리해 택배기사들이 해고 없이 안정적인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 글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바지락〉을 기획하는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에 투고를 의뢰해 게재하는 글입니다. 〈바지락〉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글을 환영합니다.